



2019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19. 5. 29(수)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목차



I 법인 관리



II 예산·회계·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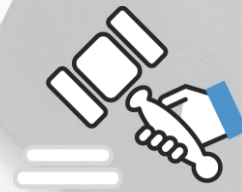
III 보조금



IV 후원금



V 인사 관리



VI 시설 관리

1 활용방법

-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내용만 발췌하여, 업무유형별로 편제
- 실제 지도점검시 지적사례 위주로 수록
- 중앙부처, 부산시 등 주요 질의회신사항 수록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조건 강화하여 수록**
- 법령 우선순위 : (시설) 개별 복지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법 > 민법
- 지침 우선순위
(1순위) 개별시설별 중앙부처 및 부산시 지침
(2순위) 복지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순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 주요 개정사항

p. 78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건비 편성기준 안내
p. 80	법인회계로의 전출 규정 변경
p. 110	통장, 세입세출외(통장,현금) 관리
p. 113	문서24 활용 공문 수발신
p. 123	보조금 표준 교부조건 본문 규정
p. 125	대표적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사례 유형 추가
p. 127 ~129	위법행위 종사자, 부산시 퇴직공무원, 공개채용절차 위배자, 재무회 계 담당 특수관계자 관련 보조금 집행제한 기준 신설
p. 139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세부 지급기준

2 주요 개정사항

p. 157	퇴직급여 적립 기준
p. 169	항공마일리지
p. 172	소액 경비 기준 완화
p. 172	후원금, 사업수익금에 대한 클린카드 기능 적용 제외 가능
p. 193	공개모집 원칙 예외, 부산시 공개채용 등 운영 강화 규정
p. 203	복지부 (유사)경력 인정 개정사항
p. 217	근태관리(외부강의 포함) 강화, 휴가 등 공무원 수준 적용
p. 235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수정 발급



II 예산·회계·계약



1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 (p.76)

- 회계의 구분 :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각 시설의 회계**
- 이월 : 이사회 의결/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월
 - 법인 산하 시설은 시설운영위 사전 보고 후 이사회 의결 거쳐야 함
- 특정목적사업예산
 -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자원 적립시, 구청장, 군수 사전 보고 의무
(例) 비지정후원금을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다년간 적립
 - 공익법인은 해당 적립금이 연말결산, 세무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편성 지침 통보 가능
 - 과도한 직책보조비, 예비비 등 통제방안으로 활용
- 세입.세출과목 : 별표 1 ~ 4
 - 기타 5~6, 어린이집 7~8, 장기요양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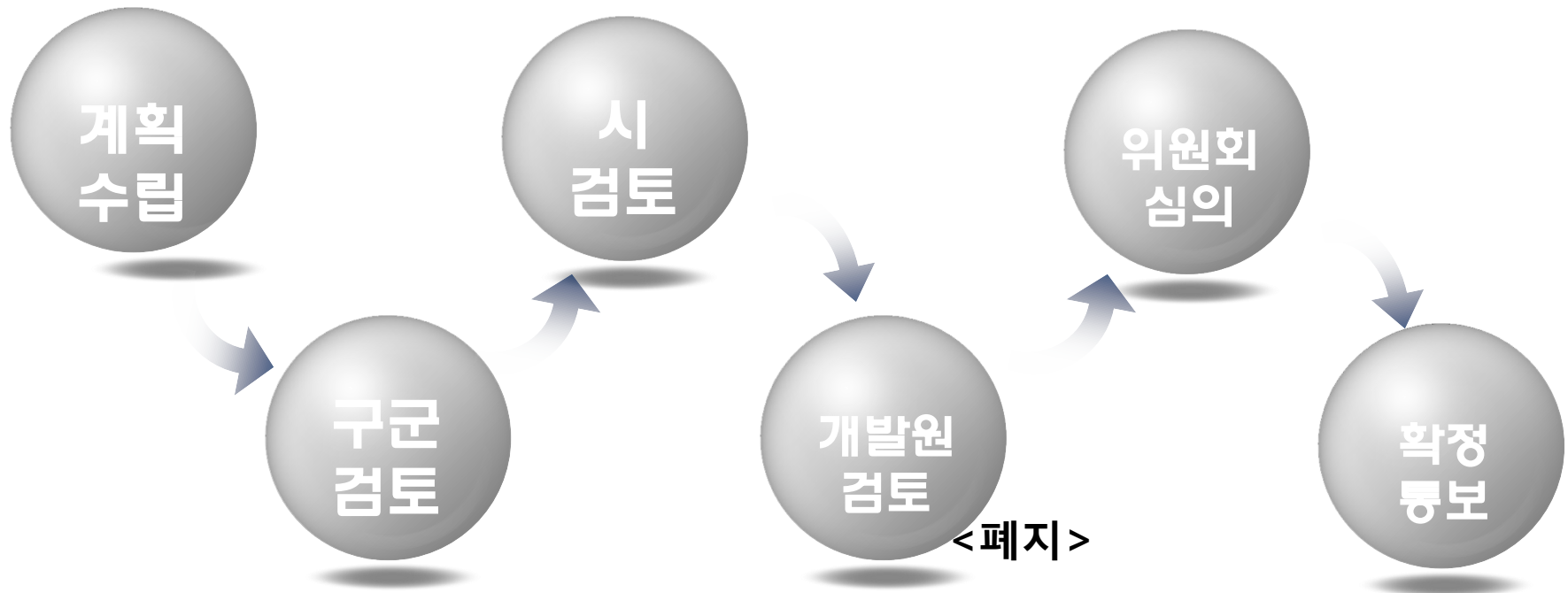
1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

-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의무 편성 비율에 대한 고시 시행
- 추가경정예산 : 편성 확정 후 7일 이내 구청장, 군수 제출
- 전용 : 관, 항, 목간 변경
 - 관, 항 전용은 '이월' 절차와 동일, 결산보고시 과목전용조서 첨부
- 예산 초과 지출 금지 : 시설정보시스템은 관, 항, 목 편성액 초과 지출 가능
- 법인회계로의 전용 : 동일 법인 내 타 시설 자연재해 개보수만 가능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총당 목적 (1%내)
(例) 원래 회계과목으로 지출가능함에도 예비비 지출
- 결산보고서 제출 : 이사회 의결,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3/31한 제출
(例) 3/31한 미완성 결산서 제출, 4월에 결산서 수정 → 시정명령 등 가능

2 계약 (p.83)

-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
- 원가계산서 작성 소홀
- 예산액 초과 설계
- 선금 지급에 따른 보증서 미확보
-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사용
- 지연배상금 미징구
- 결격 사유대상 업체와 계약 체결
- 임의 분할계약
- 특정 명칭으로 실적 제한
- 경제적인 가격 분석 누락
- 필수 서류 미구비
-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부당 수령

3 기능보강 (p.90)



4 물품관리 (p.103)

- 재물조사 : 연 1회 이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물품관리 메뉴 활용
- 내용연수 미경과 물품 교체, 매각 등 제한
- 시설폐쇄 등 잔여재산 처분
 - 주무관청에 반납, 주무관청 승인받아 유사목적 시설 증여, 매각
- 물품처분시 온비드(www.onbid.co.kr) 활용
- 후원받은 차량, 컴퓨터, 가구 등도 재물조사시 누락없이 포함

5 자료 보관 (p.10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법인관리안내 등
- 서류 보존기간 : 정관, 허가증, 신고증 등은 영구 보존
- 타 법에 의한 서류 보존기간
 - 공익법인 : 상종법상 10년 (법인, 시설, 수익사업)
 -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시설 : 보조금관리법, 감사원법상 5년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상 3년
 - * 감사원규칙 “계산증명규칙” 참조하여 증빙자료 구비
 - * 지출관련 내부품의서 등 결재서류도 함께 지출증빙서류에 일괄 보관 (보존기간 상이)
 - * 카드매출전표는 복사 후 원본과 함께 보관 (잉크 유실)

5 자료 보관

-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만, 타 자금원천 혼용 사용 금지
- 미사용 통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폐쇄, 잔액 시설회계 수입 처리
- 매년 신규 통장 개설 불필요, 필요 수준에서 최소화하여 사용
- 이전 시설명, 대표자 명의, 법인-시설 명칭 혼용 예금주 정비
- 세입세출외 (통장, 현금) 관리 철저

6 시설정보시스템 (p.112)

-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의무 사용대상 제외
 - 장애인복지관 : ' 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완전 전환,
' 18년부터 진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권장
 -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시 편리함
- 부산시 권장 기준

구분		보조금 지급	보조금 미지급
모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설정보시스템
예외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등	의무사용 비대상	의무사용 비대상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OR 표준연계모듈시스템	의무사용 비대상

7 문서24 (p.113)

- <https://open.gdoc.go.kr>
- 온나라 수신처 지정시 대내, 대외, **문서24 수신처**, 외부, 수신그룹 선택 가능
- 법인, 시설에서는 관공서 수발신 문서를 사이트 접속하여 확인 가능
- 복지부 지침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메뉴는 제외
 - 보조금 청구, 정산 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보고 등

8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유류금품 (p.114)

- 입퇴소자 생계급여 처리
 - 입퇴소일(사망일 포함) 일할 계산
 - 해당 시설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차감 후 보조금 교부신청
 - 자치구군에서는 입퇴소자에 대한 차감액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무연고 입소 중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 사망자 통장에서 금전 임의 인출 금지 → 형법상 횡령, 사기 등 범죄
 - * 실제 업무 처리시 서울시복지재단 복지통합자료실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활용



Ⅲ 보조금



1 보조금 집행시 일반기준 (p.120)

- 보조금 교부조건은 보조금 집행 전 항상 숙지
- 벌금, 과태료 등 법령 위반행위는 보조금 집행 불가
- 보조금 지출 후 여입액에 대한 회계 처리방식
 - (例)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보험료 만기종도해약 환급금 등
 - 회계기간내 : 기존 지출 (-)지출 처리, 해당 예산과목으로만 사용 가능
 - 회계기간 종료 후 : 집행잔액에 해당하므로 반납
 - * '17 정부합동감사 중점 감사대상

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 조건 (p.122)

- 대상 : 시 및 자치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변경 등 : 명시적인 승인 요청 –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보조금+자부담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시 집행잔액 산정방식 명확화
- p.124 [별표 1] 법령, 조례, 지침 필수 확인
- p.125 [별표 2] 대표적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사례
 - 위법행위자, 퇴직공무원 채용 : '19. 10월 ~
 - 공개채용 절차 강화 : 지침 접수일과 '19. 5. 1. 중 빠른 날
 - 재무회계 담당 특수관계자 : '20. 1월 ~
 -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
 - 보조금 취득 자산 매각대 미반납, 축부의금 집행, 보조금 이월, 외부강의 기준, 휴가 기준 위배자 보조금 환수
 - 무자격자에게 기능보강 공사 도급 등

- 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조치
 - 보조금 집행액의 계산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비율까지만 인정)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결정시	예산반영시			
			Case1	case2	case3	case4
			(예산총액 동일)	(보조감액= 총액감액)	(보조감액< 총액감액)	(당초예산< 수정예산)
보조금	80	70	70	70	70	70
자부담	20		30	20	0	70
합 계	100		100	90	70	140

○ 2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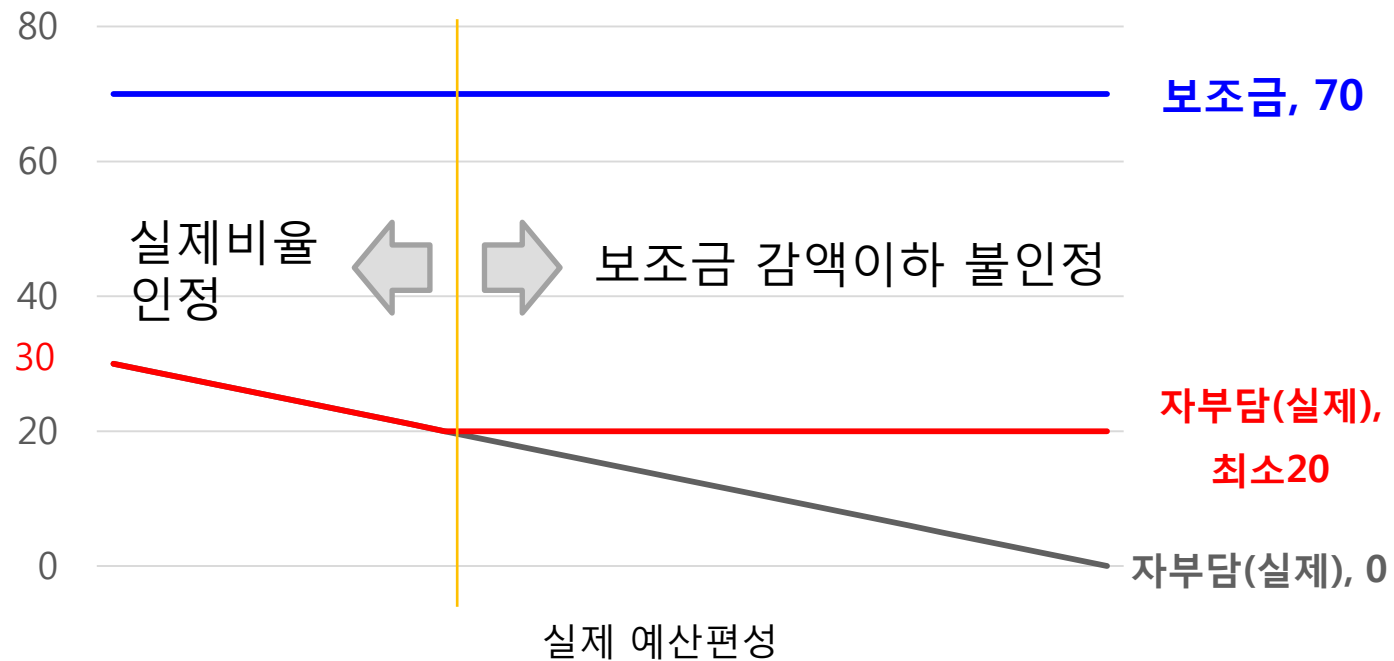
- 실제 집행액이 예산 90대비 80만 집행한 경우
80중 보조금 집행액은 70/90의 비율로 산정 (62.2 -> 집행잔액은 7.8)

○ 3번 사례

- 실제 집행액이 70인 경우(회계상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70의 집행액 중 보조금으로 집행액은 70/90으로 간주
즉, 보조금 집행액은 54.4로 보아 15.5는 집행잔액으로 반환 대상임

- 법인에서는 회계연도 중 보조금:자부담 부담비율 변경 등은 반드시
"통보" 방식이 아닌 "승인요청" 방식으로 주무관청과 협의(단순 "통보" 방식 불인정)

○ 당초 보조금 80, 자부담 20에서 보조금이 70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p.123
 -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문상 제목으로 명시하여 승인요청 형식으로 제출
 - 일반적인 내용에 묻어서 해당내용을 포함하였다는 식으로 제출 후 주무관청에서 별다른 불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무관청에서 승인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공통교부조건으로 명시함

- 앞의 경우처럼 보조금과 자부담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기능보강사업 사례 이외에도 모든 세입과 세출은 자금원천을 고려하여 추진
 -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차량/화재보험료, 세금 등 환급금의 세입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의 매각대금 처리
 -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포인트)
 - 입소자 식대와 종사자 식대 혼용, 2개 이상 시설에서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혼용하여 집행 후 반환 처리
- * 보조금/후원금/자부담 등 자금원천별 처리 원칙
 - (예) 발생이자 : 보조금 – 반납, 후원금 – 후원금,
자부담 – 기타예금이자수입
 - (법인회계 현금성기본재산 – 배당및이자수입)

3 보조금 주요 집행 제한기준 (p.127)

- 법인,시설 운영 관련 위법행위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 제한시점 :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또는 검찰 기소(기소유예 포함)된 날짜 중 빠른 날짜
 - 해제시점 : 경찰에서 검찰 송치없이 수사 종결, 검찰 불기소처분일 (기소유예 제외) 및 법인 무죄 확정 판결(선고유예 제외) 중 빠른 날짜
 - ' 19. 10. 1. 기준 위 제한시점~해제시점 해당자부터 적용
 - 해제시점 기준 해당 연도 인건비 보조금 예산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집행 가능
- 법령상 인건비 집행 제한 해제시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 경과
 - 징역형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7년 경과
- 근무배제 불이행시 보조금 감액 또는 지원 중단

3 보조금 주요 집행 제한기준

- 퇴직공무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 대상 : 사회복지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아니며, 시설 자부담 지급 가능
 - '19. 10. 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하여 적용, 기존 취업되어 있던 자 및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개채용 절차 위배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 재무회계 담당 특수관계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4 인건비 (p.130)

- 보건복지부 개별 지침 또는 부산시 담당부서 개별 지원기준이 우선
- 복지부 지침상 수당(3)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부산시 지침상 수당(2)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 각 시설유형별 시 담당부서 예산지원기준 우선 적용하여 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명절 당일임(지급일이 아님)
 - 임의 수당 또는 현금 지급 기타후생경비도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例) 성탄축하금, 생일축하금,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명칭 불문
 - 비정규직 종사자도 인건비 보조금 예산 범위내 지급 가능
- 15년 : 복지관(사회, 장애인, 노인) 종사자 단일 급여기준 적용
 16년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단일 급여기준 확대 적용
 - 복지관(3) +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17년 : 관리직군 기준 세분화(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5 퇴직 급여 (p.157)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12. 7. 26. 이후 중간정산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무주택근로자 주택구입, 전세금, 근로자(가족) 요양비 등)
-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급여 적립대상이 아님(자금원천 불문)
- 개인운영시설의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p.174) (2016. 2. ~)
- 개인운영 장애인그룹홈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p.174) (2017. 2. ~)
 - 1인 운영 그룹홈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 제한 해제
- 퇴직적립금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 금지
-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매월 일정액 적립하는 방식의 경우, 시설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6 보조금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p.162)

-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기준
- 시설장 65세 [02.01.01. 재직중인 설립자(직계 1세대 포함)는 70세]
종사자 60세
- 지급상한기준일 산정 : 출생일 기준
 - 1월 ~ 6월 : 6월 30일, 7월 ~ 12월 : 12월 31일
- 주무관청 승인하에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16 개정)
 - 2회의 공개모집 절차에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7 여비 집행기준 (p.164)

-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준용하되, 모든 종사자는 제2호 적용
- 수당 성격의 출장여비 보조금 지급 제한
- 업무시 사용한 차량에 소요된 통행료, 주유비, 주차료 등 보조금 집행 가능
- 관외 출장여비
 - 증빙서류를 갖춰 기준에 맞게 신청한 경우 출장자에게 여비 지급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실비의 항목별로 지급
 - 증빙서류 구비, 자가용 이용, 동승자 지급기준, 업무용 차량 사용 등 세부사항 숙지 후 여비 지급
- 항공마일리지
 -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일리지는 공무원 수준으로 관리

8 보조금 전용카드 (p.171)

- 부산시는 부산은행 외에 2018년부터 국민은행과 추가로 협약 체결
 - 접근성 등 고려 변경 가능, 보조금전용통장으로 개설하여 보조금 수령
- 클린카드 기능 일괄 탑재
 - 생활시설 입소자의 복지서비스 위하여 이미용, 사우나 적용 제외 가능
- 상용,소액 경비지출 범위
 - 부산시는 1만원 이하, 기관명의 외근용 교통카드,하이패스의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충전하여 사용 가능
 -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마일리지는 개인적 사용 금지, 소멸 전 사용 ('19 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결과)
- 상품권(온라인상품권 포함)은 관리대장 작성, 배부내역 투명하게 관리



IV 후원금



1 후원금의 모집 (p.174)

-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例) 건물 옥상 이동중계기 설치비, 텃밭 이용료, 숙소 사용료, 시설 주차장 사용료 등은 기부 개념이 아님에도 부당 기부금 공제 사례 적발
- 후원금 전용계좌 : 법인, 시설 분리하여 안내, 실제로 분리하여 수입,지출
(例) 시설후원계좌인 듯 법인후원계좌 안내. 아예 혼용하여 안내
- 임직원 대상 직급별 후원액 지정, 배우자나 자녀 명의 차명 후원 강요 금지
(例) 시설종사자가 운영법인 후원계좌에 후원. 법인 시설전출금으로 사용

2 후원금의 관리 (p.176)

- 보조금전용카드처럼 후원금도 클린카드 기능 부여 후 사용('14~)
클린카드 : 룸살롱, 주점, 골프장, 노래방 등 불건전업소 승인제한기능
- 모든 후원금은 전용통장을 통하여 수입 및 지출
(例) 불확정적인 후원협약에 근거하여 후원금영수증 발급
- 법인→시설 전출금(후원금)도 시설 후원금 전용통장으로 관리
+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입계정으로 별도 관리
- 법인→시설 전출금(후원금)도 시설 후원금 전용통장으로 관리

3 후원금의 집행 (p.178)

- 후원금은 회계연도 내 집행토록 노력 VS 연초 보조금 지연 교부
- 법인전입금 VS 법인전입금(후원금)
전년도이월금 VS 전년도이월금(후원금)
(例) 별도 수익사업 없는 종교법인에서 산하 시설 전출금 송금시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여 후원금 성격 소멸, 자부담처럼 집행
* 비지정후원금 사용제한항목으로 사용시 지침 위반
- 지정,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예산과목에서
“세목” 에서 구분하여 관리

“한번 후원금은 영원한 후원금”

4 지정후원금 (p.180)

- 광범위한 형태로의 지정은 사실상 비지정 성격에 해당
(例) 복지관 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
- 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수입지출 매칭 관리
- 대표이사, 시설장 등 특정인 업무추진비로 지정은 공익법인의 후원취지(불특정 다수가 수혜받도록 기부)에 맞지 않아
세법상 부당 기부금 공제에 해당

5 비지정후원금 (p.184)

- 보건복지부령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 사용기준 있음
 - 근로기준법 및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수당 및
 - 사회복지업무수당(복지공무원기준 및 비지정후원금 50%초과 불가)
 - 직책보조비 사용 불가 (명칭 불문 :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
 - 기관운영비, 회의비는 15% 내에서 후원금 모집 목적 사용 가능
 -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 사용 불가
 - 토지, 건물 자산취득 불가. BUT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例) 비지정후원금을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다년간 적립

5 비지정후원금

-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17 개정)
- OO사업비는 직접비, BUT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 법인회계전출금,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 불가
- 간접비 항목 축소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의 직접비 전환) ('16 개정)
- 예결산서에 수당편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 승인 얻은 게 아님
- 예결산서는 편성된 수당의 자금원천(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파악 불가

6 후원금 수입 및 사용 통보와 공고 (p.188)

- 정기간행물(소식지)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는 결산보고시 함께 보고, 공개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전입금(후원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등 누락 유의
 - 다수의 후원금 통장 보유시, 거래가 적은 계좌 등 누락 유의
- '16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게시 가능

7 후원금 관련 위반시 처리 (p.189)

- 과태료 : 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 미이행 등
- 개선명령 :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 잘못 지출된 후원금은 자부담액 등을 메워 넣도록 회계 시정 조치



V 인사관리



1 채용 (p.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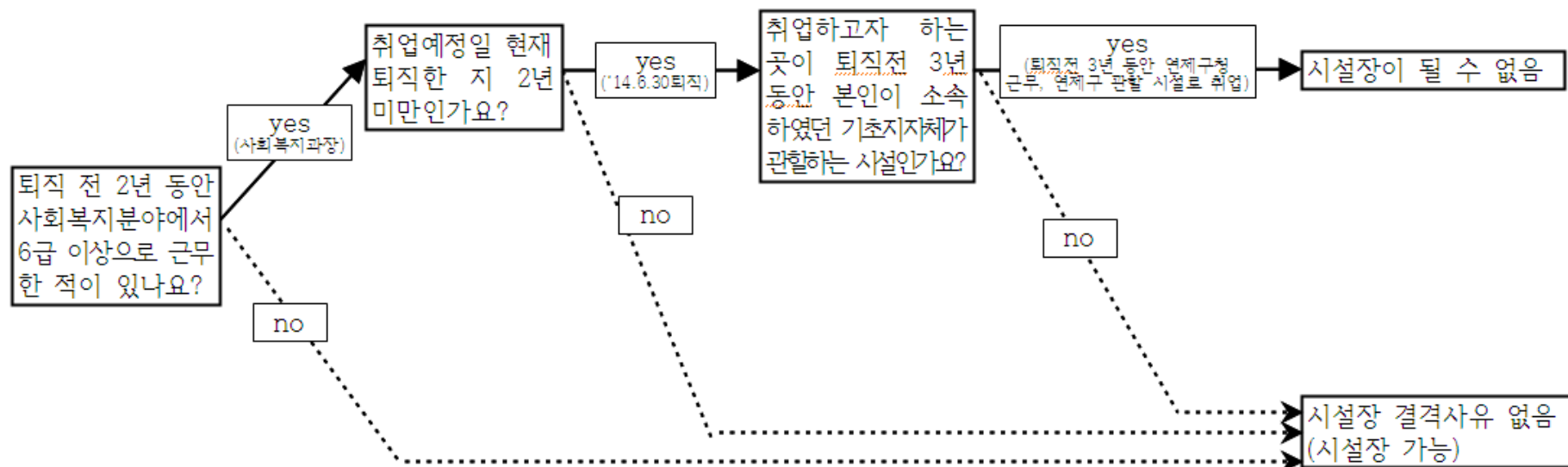
- **공개모집 원칙**
- (복지부 지침) 해당 법인(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
(例) 공고 증빙자료 조작, 초단기간 공고, 법인홈페이지에만 공고, 채용과 무관한 자격 요구 등
- **면접관-면접대상자, 대표이사(시설장)-회계담당자 특수관계자 배척 원칙**
- 단계별 합격여부 통지(불합격 통지 포함), 서류 반환 요구시 반환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 **일정요건* 충족시** 동일한 시설 내 승진, 인사이동, 동일 법인 내 시설간 인사이동, 법인사무국에서 산하 시설로 인사이동은 공개모집 원칙 미적용
 - * **공채채용자, 법인과 근로계약, 특수관계자 X, 자격기준 충족**

1 채용

- 부산시 공개채용 등 강화 규정(일반 공개채용)
(복지부 지침) 해당 법인(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
(부산시 지침) 해당 법인(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3곳 이상(워크넷 반드시 포함)** 사이트에 공고
- 부산시 공개채용 등 강화 규정(특수관계자 공개채용)
(복지부 지침) 특수관계자 인사발령(승진, 인사이동 등)시 공개채용 원칙
(부산시 지침) 복지부 지침 + 면접위원 구성시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 + 자치구군에서 추천한 외부추천이사 1명 이상 포함 + 면접대상자가 특수관계자임을 면접관에서 사전 공지**
- 법임 임원,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시설 재무회계 담당 불가
(부산시 지침) '19. 12. 31.까지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전보
미시행시 ' 20부터 인건비 집행 제한, 요양원은 복지수당 집행 제한

1 채용

-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확행 성범죄만?(X)
 - 장애인복지시설이니 장애인복지법상 결격여부만 확인? (X) **과태료 부과**
 - 퇴직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 등 저촉여부 필수 확인
 - ※ 복지환경국장, OO동장 → **不可** (' 16 복지부 해석 변경)



- ※ 취업제한기관(100억이상 법인)과 함께 업무취급제한도 필수 확인
→ 법령 위반 확인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전액 환수

1 채용

○ 사회복지사 채용

- 법령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업무에는
“자격 취득 예정자” 채용 불가

○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전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보고
(시설) : 자치구군 접수
(법인) : 자치구군 검토 후 부산시에서 접수

2 호봉 (p.202)

-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 열거주의
- 사회복지시설 경력 : 100%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18.부터 근무경력 인정, '19.부터 경력합산)
- 유사경력 : 80%
 - (개정누락분 : 정오표 5월초 배부)
 - p.203 “2) 유사경력의 가 본문” 에 언어재활사 추가
 - p.205 “자 본문” 에 드림스타트 →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강조사항)
 - p.203 “너 본문” 은 부산시장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해당 X
(19년 추가사항) → **올해부터 경력합산(호봉반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시설 인정 전), 입양기관,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근무 경력 중 일정 조정 충족자, 독거노인지원 돌봄사업

2 호봉

- 주요 위반사례
 - 부산시 허가 사단법인 근무경력을 100% 또는 80% 인정
 - 유사경력(80%) 인정 대상 경력을 100%로 인정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
- 종사자 신규채용시 경력증명서 외에 사회보험가입내역, 이전 근무기관 설치신고서 등을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 확인**, 인건비 과다지급 사전 예방
- 경력인정기준은 보조금 인건비 지원시설에만 해당 (요양원은 적용 제외)
- **부산시 설치(위수탁) 기관 유사경력 인정 추가**
 - ('17~)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노인생활체험관교육지원센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등 6개 기관
 - ('18~)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등 1개 기관
 - ('19~) 별도 추가 인정 기관 없음

2 호봉

○ 군경력

- 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최대 3년까지만 인정
- 제대군인 + 의무소방원, 전의경, 경비교도 등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8 복무관리 (p.215)

- 시설장 상근의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 (평일 09 ~ 18시 상시 직무에 종사)
 - 영리업무 종사 금지. 비영리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필요
 - 상근의무 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시설 정상 운영 가능 범위 내)
 - 출강 등 외출 시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연차)에 기록 유지
 - 겸직에 따른 직책보조비 : 시설운영위원회 의결 + 시설운영규정 금액 명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인 업무 수행 관련
 - 해당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단기, 일회성 행사
 - & 시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 시설 종사자가 해당 법인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주요 점검사항
- 외근 및 연가 관리는 전 임직원이 한꺼번에 일괄하여 작성 유지

8 복무관리

○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기준('17 신설, '18 폐지, '19. 10~ 부활)

- 적용대상 : 보조금 인건비 지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강의범위 :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을 하는 경우
(例)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과목 시간강사로서 강의 등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허용범위 : 월 최대 12시간 이내
 - * 12시간 초과 강의는 원천적으로 불허
- 근무시간 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출강은 반드시 개인 휴가 활용
- 근무시간 외는 사전 신고대상 아님(이동시간 고려시 신고대상 될 수 있음)
- 운영 법인 내 타 시설 강의시 보조금으로 강사료 집행 금지

8 복무관리

○ 휴가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4종류. **이외 대표자 재량 휴가 원천적 불허**
- 병가 :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하여, **연 60일** 범위 내 사용
- 공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분 적용
 - *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동원, 훈련 참가, 업무관련 국회, 법원, 검찰 등 소환, 투표 참가, 건강진단(검진), 헌혈 참가 등
- 특별휴가 :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8 복무관리

- 유급 휴가를 부당하게 무급처리 금지
- 여성 종사자 모성 보호 철저
 - 90일 산전후휴가 이외 출산전 출산휴가 분리 사용 허용,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 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자녀돌봄육아휴가 부여 등
- 출산휴가 보조금 지원기준
 -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대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차액은 보조금 지급 가능

통상임금 대비 출산휴가급여 차액 (B)	통상임금 대비 출산휴가급여 차액 (C)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A)	
출산휴가 시작일	60일 (다태아 75일)
	90일 (다태아 120일)

8 복무관리

- 보수교육시 근무상황 처리 및 보조금 집행 허용 기준
 - 소지한 자격증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근무상황은 “**교육명령**” 처리
 - 해당 보수교육비는 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20만원 부과 대상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불참을 직간접적 강요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
 - (例)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 ' 19. 6월말까지 18년도 미이수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 (약60여명)
- 대체인력 지원
 - 수탁기관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507-1285)
 - 단기인력 : 국비시설 우선 지원,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1회 5일 원칙 최대 20일
 - 장기인력 : 시비시설, 출산, 질병휴직 등 발생시 최대 3개월



VI 시설관리



1 시설의 설치 및 위탁 (p.232)

- 국가, 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 : 구군에 신고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설치신고증 교부 사례 감사 지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신고대상이 아님, 반납 필요
 - 다만, 타 법령에서 신고증 제출을 요하는 규정이 있으면 발급 허용
- 국가, 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 : 구군에 신고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설치신고증 교부 사례 감사 지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신고대상이 아님, 반납 필요
 - 다만, 타 법령에서 신고증 제출을 요하는 규정이 있으면 발급 허용
- 금년부터 복지부 지침이 개정되어 **사업자등록증, 시설설치신고증 상 표시된 명의가 시설을 설치, 운영, 수탁받은 법인으로 서로 동일하여야 함**
- ' 19년말까지 시정, 정비 미완료시 ' 20년부터 보조금 지급 지양

④ 사명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시설의 장 선임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증

()

등록번호 :

① 법인명(단체명) :

② 대표자명 : 법인 대표이사 이름

③ 개업 연 월 일 :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본점 소재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책임명 :

(생년월일 또는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



고 유 번 호 증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시설의 장 설명 :

(생년월일 :)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법인 대표이사 이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 인 등 록 번 호)

소재지 :



Diagram illustrating the flow of information for a Social Welfare Facility Registration Certificate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and a Unique Number Certificate (고유번호증).

The top section, titled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contains fields for:

- 시설의 명칭 (Facility Name)
- 소재지 (Location)
- 사업종별 (Business Type)
- 수용정원 (Capacity) in 명 (Persons)
-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Operator or Operating Legal Entity Name)
- 주소 (Address)
- 시설의 장 설명 (Facility Director's Information)

The bottom section, titled "고유번호증", contains fields for:

- 단 체 명 (Entity Name)
-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Name) : 법인 대표이사 이름 (Legal Representative Name)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Representativ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법 인 등 록 번 호) (Legal Entity Registration Number)
- 소재지 (Location)

A large red 'X' is placed over the "고유번호증" section, indicating that this certificate is not applicabl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A blue line connects the "시설의 명칭" field to the "고유번호증" section, and a green line connects the "소재지" field to the "고유번호증" section.

1 시설의 설치 및 위탁

○ 민간위탁

- 국가,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 공개모집,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
- (例) 수탁심사시 법인전입금 납입액을 위수탁계약서에 미기재, 법인전입금 의무 납입 미이행하였음에도 방치한 사례 감사 지적
- 수탁 선정 공모시 종전의 시설장을 고용승계하기로 한 경우 재위탁일 전까지 시설장 고용승계에 대한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가급적 5년으로 함 → 5년으로 함 (' 16 법 개정)

★ 현재 민간위탁제도 개선 관련 용역 진행 중이며, 개정된 위수탁심사지표는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2 보험 가입 및 안전 점검 (p.244)

- 사회복지시설은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가입 의무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화재 외의 안전사고에 의한 보험은 '14. 6. 5.부터 의무사항임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보험은 소멸식 상품 가입 지도, 적립식 상품은 만기환급금 회계 세입 처리
- 시설 자체 안전점검
 - 시설장은 매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 구군에 제출
 -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취약점 발견시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 의뢰
 - 구청장, 군수는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개보수 등 요구
 -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함

2 보험 가입 및 안전 점검

- 지자체 안전점검
 - 시, 구군 담당부서에서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현지점검 실시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18~)
- 합동 안전점검 : 합동점검단 중점점검대상시설 종합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시특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 무상으로 점검 실시 → 적극 활용
- 안전관리 인력 확보
 - 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시설은 연 1회 이상 실시

3 시설운영위원회 (p.251)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는 법령상 의무
- 위원은 구청장,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함 (연임 포함)
-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 ('16 개정)
- 20인 미만 : 3개소당 1개, 20인 이상 : 1개소당 1개
 - 100인 이상 :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
 -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지양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회의록 구군에 제출

4 시설 거주 요건 (p.256)

★ 거주 허용자 외 거주시 행정처분, 관리운영비 및 식대 등 환수는 물론, 해당 부당집행액이 보조금으로 확인시에는 엄정하게 고발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가족과 같이 거주 :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m^2) 이하
- 종사자 혼자 거주 : 1인당 $20m^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직원 1명 기거 의무
- 시설장, 직원 그 가족 아닌 자는 거주 제한

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p.25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가.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나.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중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8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20만원
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다.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재산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200만원
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58조제2항	20만원
사. 법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300만원
아. 법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300만원
자.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50만원
차.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休止)·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1)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2)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300만원

6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p.27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제 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6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1)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취소		
2)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바.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	자격취소		

7 복지부정신고 안내 (p.275)

- 부산시 온라인 접수 창구
 - 부산시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
- 부산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준비중
 -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재취업 지원
- 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신고
 - 국번없이 129 / 044-202-2093
 -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국번없이 110 / 13998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부정수급신고센터 (www.bokjiro.go.kr) ☎ 129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www.acrc.go.kr) ☎ 110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지도팀 김덕우
(051-888-3165, kimdeokwoo@naver.com)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index)

행정전화번호부

웹메일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안내

English

GO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미디어보드



부산민원120

부산소식

통합예약

정보공개

부산소개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경제



복지



여성·가족



도시건설주택



환경



안전



행정법무계약



공연·전시



홍보



일자리



교통



해양



건강



교육



문화관광



1

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2

전국최초! 난임부부 지원
난임 해결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새소식

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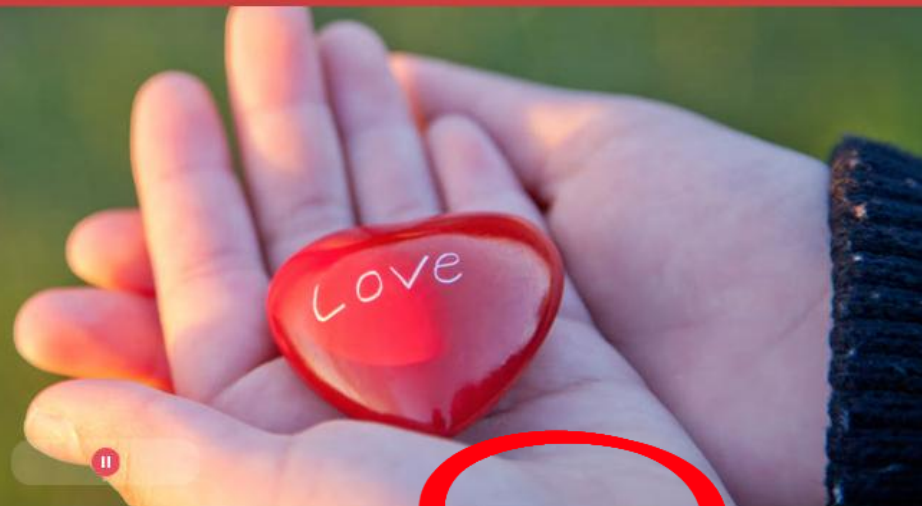
U-산복도로르네상스

어르신

장애인

찾아가는 복지서비...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더 따뜻한 부산을 만듭니다



부산 복지 소식

시민을 위한 복지 관련 유용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어르신상담



복지정책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장애인 복지정보
전동보장구 무료급속충전소
이천시청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2019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안내
- 부산시 2019 복지시책 안내
- 2019 복지시책 안내
- 희망키움 I · 내일키움 · 청년희망키움통장...
- 장애인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사...
- 장애인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사...
- 장애인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사...
- 201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
-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기관) 명단